

## ISO26000의 시대와 CSR의 향방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지난 11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ISO26000이 공개되었다. 5년에 걸친 긴 작업과 논란 끝에 완결된 ISO26000 지침은 인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 ISO 표준과는 다르지만 주요 이해당사자 집단과 국가들이 모여 사회적 책임이라는 추상 명제를 국제적 지침수준의 현실 명제로 바꾸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사회적 책임의 열렬한 지지자로 남아 있고 미국은 주춤거리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 보편적으로 공감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은 원래 자신이 가진 이해당사자 중심 모델 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이번호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국제적 지지도가 높았던 ISO26000 제정과정을 보면 당연히 저항보다는 적응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몇 년전 한창 ISO26000 작업이 진행중일 때 필자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과정을 표현한 바 있다. 과연 이 시점에서든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번호에 특집으로 실린 글들을 보면 ISO26000으로 인한 일사불란하거나 근본적인 변화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륙마다, 나라마다, 집단마다 대응의 양상이나 인정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것 아닌가하는 막연한 추측이 나오기도 한다.

여기에는 최근 리먼 사태이후 촉발되어 한창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경제위기 국면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당장 생존의 문제가 더 시급해진 탓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에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 탓이 있다. 규범으로서 사회적 책임은 완성되었지만 진정한 실천은 유보되는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보기 드물 정도의 충격을 던져주는 이번 경제위기도 결국 기업과 금융이 자본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배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경제위기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더욱 확산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동안 중국이 ISO26000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선화한 것을 보면 사회적 책임은 확장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시도한 주요 FTA에서도 다시 노동기본권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가 중국을 대체할 생산 거점이라 보았던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에서도 다국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나라 안에서도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은 정책적 화두가 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없이 글로벌 경제에서 방랑할 수는 있지만 정착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시민사회 제 집단에게도 사회적 책임은 기업을 제어하는 방편을 넘어서서 자기 책무가 되었다. 투명한 조직운영, 약자의 보호, 조직 내 인권존중 등은 ISO26000에서 노조, NGO, 시민운동에게도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ISO26000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 관련 규범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그 영향력은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 현실화될 것이다. 평상시 준비와 훈련이 없이 임기응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KLI**